

與野,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산업 지원안’ 처리 속도

회의운영 방식 대한 공동합의문 발표 대표회담 선정 민생법안 우선 처리 연금개혁·저출생 등도 논의 제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동공약 추진협의회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동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동공약 추진을 위한 협이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부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제도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할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이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

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총선 참패 원인 ‘불안정한 당정관계’”

국민의힘 총선백서 전문 공개 미완성 시스템 공천, 공약부재 등 꼽아

국민의힘이 총선백서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총선백서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은 보도자료와 총선백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분석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과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 ▲대과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조국 신당 출현(8.05점) ▲당정 관계 이슈(7.96점) 순이었다.

총선백서는 '시스템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선 당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줄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백서는 "총선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응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시했다. 총선백서에 당시 총선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다.

이지문 총선백서특위 위원은 "당정관계 현안에서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개선해줬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백서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답변 거부 사유가 백서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더욱이 대표 경선에 나온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태원 참사' 정부 진상규명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인 28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동일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韓-美, 北 러시아 파병·대북정책 공조 논의

워싱턴서 '외교·국방 장관회의'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도 협의 내달 1일, 캐나다와 2+2 장관회의

정부가 이번주 미국,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 군대를 보낸 북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태열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

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조 장관은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김 장관, 캐나다 멜라니 졸리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3번째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및 양국의 국방·안보·방산 협력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졸리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7월 채택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최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와 양국 안보·방산 파트너십 제도화 기반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미·한일과 논의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